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만들기 정책

명상순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사무관

어촌소멸의 위기

저출생 문제^{*}로 미래세대 부담은 커지고 국가 경쟁력 저하와 국가의 지속성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소년인구(0~14세)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로 소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명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출생률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2000년대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81.2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4년 약 5,200만 명에서 2072년에는 약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위기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출생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89개의 기초지자체가 지정되어 있다. 특히 도시지역보다 농촌, 농촌보다는 어촌의 상황이 더 심각한 편이다. 어촌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취약한 생활서비스 등 열악한 생활경제 여건 탓에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더 소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2배이고, 어가인구는 2000년 대비 61.4%가 감소하였으며(2000년 25만 1,000명 → 2020

* 합계출생률: 1970년 4.53명 → 2023년 0.72명(출처: 통계청)

** 출처: 통계청

*** 고령화율(총인구 중 65세 이상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전국/어촌): 2010년 9.1%/23.1% → 2015년 13.1%/30.5% → 2023년 18.2%/48%(출처: 통계청)

년 9만 7,000명), 어가인구 감소율은 농가인구 감소율 대비 2.5배에 이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45년에는 어촌지역 494개 중 87% 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촌의 중요성

어촌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렇듯 소멸해 가고 있는 어촌을 방치할 수는 없다. 어촌은 우리 식탁에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해양영토 수호, 활력을 재충전시켜 주는 여가공간 제공, 바다환경 보존, 해양 재해 방지 및 구호, 전통문화 계승·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은 2019년 기준 약 8,8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류정곤, 2019, p.125). 어촌이 소멸되는 것은 단순히 마을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 생산 거점, 국토의 수호기지, 국민들의 휴식처, 해양환경 보존 거점, 해상 사고 구호처가 사라지는 것이다.

어촌소멸 극복을 위한 발걸음: 어촌뉴딜300사업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귀어·귀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가속화하고 있는 어촌소멸 속도를 고려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혁신 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라는 3대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9년 70개소,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2022년 50개소 등 300개소의 어촌·어항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3조 원(개소당 평균 1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까지 141개

* 어가인구: 2018년 12만 명 → 2023년 8만 7,000명(▲27.5%), 농가인구: 2018년 231만 명 → 2023년 208만 명(▲9.9%)(출처: 통계청)

**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소멸 고위험지역은 0.2 미만

소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도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은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준공된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접근성이 향상되어 여객선 이용객과 관광객이 늘어났으며, 소득사업 시행으로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남 신안군 만재도의 경우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접안시설을 마련하여 사람이 살기 시작한 1700년대 이후 처음으로 여객선이 접안하였으며(기존에는 해상에서 종선으로 환승), 직항노선 개설로 목포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의 운항시간도 5시간 40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단축되었다. 경북 경주시 수령항은 태풍 내습 시 월파로 상습 피해지역이었으나 월파방지시설 개선 이후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천 강화군 후포항과 경기 화성시 백미항의 경우 시설 정비를 통해 정체되고 쇠퇴해 가던 어촌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늘었으며 주민 소득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어항시설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어촌활력 저하 및 어촌소멸 문제를 온전히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있어 왔다.



만재도에 조성된 접안시설

출처: 해양수산부(2021)



수령항 월파방지시설 개선

* 여객선 이용객 수(21개소): 2019년 151만 9,000명 → 2022년 166만 명, 유동인구(71개소): 2019년 3,808만 명 → 2022년 3,869만 명(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후포항 상인 매출액 증가 40%, 백미항 관광객 증가 297%(출처: 해양수산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한 도약: 어촌신활력증진지원사업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취약한 어촌의 해상교통, 정주 여건, 어업 기반 등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어촌은 여전히 도시와 농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고* 보건·복지 등 생활 전반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복지·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어촌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23년부터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하여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200만 명의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①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 ②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 ③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산업 기반 지역을 어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1유형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사업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어촌 경제·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어촌경제거점’ 25개소를 육성한다. 수산물 상품화센터와 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와 해양관광단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175개소를 형성하는 제2유형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사업은 지방어항·정주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소득원을 발굴하고, 소득 형태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거 기반과 생활서비스 공간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소규모 어촌 100곳의 최소 안전 수준을 확보한다. 재해안전시설과 어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사업의 경우 민간 앵커조직이 지역조사, 지역사회 의제 발굴, 사회혁신실험 시행 등의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기존 사업들과는 달리 앵커조직이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의 시각에서 삶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정착시키게 된다. 2023년 65개소(유형1 5개소, 유형2 30개소, 유형3 30개소), 2024년 33개소(유형1 5개소, 유형2 10개소, 유형3 18개소) 등 총 98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삶의 질 만족도(2020년) 어촌 4.4, 농촌 5.1, 도시 6.4(출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재인용)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사업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사업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

아울러, 어촌신활력증진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면서 시행 시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환류를 통해 사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2022년부터 충남 태안, 전남 고흥, 경남 거제, 강원 동해 등 4개 지역에 대해 어촌신활력증진지원사업의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사업과 유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소멸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5월 관계 부처 협동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연안을 많이 찾는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하여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까지 50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어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관광객이 찾으며 주민들이 살맛 나는 그날까지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상우, 류정곤, 황재희, 이상규. (2018).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 류정곤, 엄선희, 박상우, 고동훈, 심성현, 오서연. (2019). 우리나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3 해양수산부. (2018). 어촌의 새로운 경제 활력, 어촌뉴딜300 본격 시동. 12월 19일 보도자료.
- 4 해양수산부. (2021). 어촌뉴딜로 어촌생활이 확 바뀐다. 4월 21일 보도자료.
- 5 해양수산부. (2022). 어촌에 총 3조원 투자… ‘잘사는 어촌’ 시대 연다. 9월 23일 보도자료.
- 6 해양수산부. (2024).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5월 13일 보도자료.